창사 64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8256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음력 7월 20일)

농협·수협 전남 이전 논의 ‘제자리걸음’

尹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감감무소식’
법령·정관 변경 등 선결과제 많아 ‘산 너머 산’
균형발전 차원 법 개정·정부 정책적 판단 절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초 건의한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협·수협중앙회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윤석열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정관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정책적 판단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4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면서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지사가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건의한 것은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과 식량안보 위기에 따라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생명·금융 융복합 허브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남이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이자 유관 공공기관 집적 지역으로 농수산 경제 거점 조성의 최적지라는 점도 감안했다. 무엇보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발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출발점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상 농협·수협 중앙회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서울시로 규정된 주 사무소에 관한 법령(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과 정관(농협중앙회정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변경도 선행돼야 한다. 정관 변경은 농협·수협 총회 과반 출석 및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책은행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은행을 놓고 대구·대전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공기관의 경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 대상으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등 41개 기관을 설정하고 이전 필요성과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41개 기관은 ▲지역 비교우위 분야로 시너지 극대화 가능 기관 10개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 19개 ▲연구기관·공공기관 투자기업 12개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정과제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방침에 대비해 농협·수협중앙회 이전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사진은 광주 도심. /김애리 기자

지방 112만호 등 5년간 총 270만호 공급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규모-지방정비사업 활성화 물량 확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관련기사 3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지역 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 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올해 수능 내일부터 원서접수

내달 2일까지…코로나 확진자·장애인 수험생 대리접수 가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번 주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고3 장애인 수험생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고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중 타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9월 1-2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별로 3만7천-4만7천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25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다.

수능 시험은 11월 17일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채만 기자

Today

“쌀값 하락, 대통령 입장 밝혀라” 4면
전남청년인구 유출 막을 길은? 5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홍도 14면